

국감, 전현희 감사·가짜뉴스·양평 고속도로...다시 격돌

오늘부터 2주차 국정감사 돌입 국도교통위 통계 조작 의혹 공방 기획재정부 '세수 핑크' 논쟁 일 듯

16일 여야가 2주차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대선 가짜뉴스 의혹' '이태원 참사'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통계조작 의혹은 이번주 국도교통·문화체육관광·법제사법 등 거의 모든 상임위를 관통하는 이슈다.

오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 국감에서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 격돌한 법사위도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법사위의 경우 이밖에도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가는 만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감에서도 전 전현희 위원장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를 분위기다. 대북 협력사업 지원, 법인카드 사용 문제를 두고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는 최근 국정원과 함께 진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정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놓고도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핑크' 사태가 도마 위에 올라 여야가 세수 결산을 두고 책임 논쟁을 벌일 전망이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 등도 집중 타깃이 될 예정이다.

국방위의 경우도 방위사업청 등 대상 국감에서 국방 분야 R&D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인적쇄신 끝? 국힘 김기현 2기 체제로 지도부 재편

"수도권·중원 출신 중용"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2기 체제'를 꾸리려 했다.

취임 이후 지난 7개월여를 함께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면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당 지도부 진용을 재편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후임 인선을 단행해 당을 '총선 대비 체제'로 조기에 전환한다는 게 김 대표의 구상이다. 김 대표는 15일 의원총회를 전후로 후임 인선을 공개하고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2기 체제를 완성해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총선 공천 실무는 주도할 사무총장, 공약라인을 책임질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1명 이상을 '수도권·중원' 출신으로 우선 채우기로 했다.

다만 당의 주축을 이루는 '영남'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도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총사퇴로 현재 지도부 내 영남권 인사는 TK(대구·경북) 윤재옥 원내대표, PK(부산·울산·경남) 김 대표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까지 총 3명이 남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안방을 완전히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TK 등도 최소한 1명 이상 합류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운(진운석열), 비운(비운석열) 등 당내 특정 계파색이 짙은 인사는 가급적 지양할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키워드는 탕평"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사무총장·정책위의장 후보군에는 3선급 중에서 안철수(경기 분당을)·유이동(경기 평택을), 수도권에 출마 선언한 하태경(현 부산 해운대갑), 김도읍(부산 북강서을)·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이 거론된다.

사무부총장(전략기획·조직), 여의도연구원장, 수석대변인, 지명직 최고위원 등 역시도 수도권·중도 출신 인사를 우선 중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명직 당직자 8명 중 최소 1명 이상은 원외 인사로 기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지도부'와 비교하면 영남·진운 비중은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런 변화에는 내년 총선 승부처 역시 수도권·중원이며, 이를 지역 공략이 상당히 어렵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충격 효과'도 있다. 특히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중도층·2030세대 민심이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들을 겨냥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당장은 김 대표가 새롭게 구성한 '2기 진용'에 당 내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이다. /연합뉴스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중동 국가와 첫 FTA 체결

한국이 중동 지역 '주요 우방'인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중동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처음이다. 정부는 중동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신(新)중동'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UAE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핵심 파트너국이다. UAE로의 바raq 원전 및 대규모 방산 수출 등이 이를 보여준다.

무엇보다 UAE는 한국의 세 번째 원유 도입국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주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 무역 특임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관세 인허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등 시장 접근 확대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강화 확대 방안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CEPA

는 한국이 체결하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리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이 일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UAE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 경쟁국 대비 자동차 수출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UAE는 현재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5% 관세를 일률 부과하는데, CEP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현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UAE가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음악 콘텐츠 등 한국의 최우선 관심 분야를 기존에 다른 나라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에서 온라인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기는 UAE에 K-게임 진출이 확대되고, 영화와 음악 등 K-콘텐츠 소비도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연합뉴스